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1998. 7

통 일 부

목 차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 햇볕정책은 왜 필요한가?
3. 햇볕정책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
4.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 록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론은 과연 옳은가?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반세기 이상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부터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②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③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현 정세의 이중성에 비추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면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정책이다.

북한은 80년대 말 동구권 붕괴 이후, 개방과 개혁이 체제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정책과 대남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북한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책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압박과 봉쇄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의 경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전략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을 대북정책의 첫번째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보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이 그들의 체제안정과 실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이 체제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분명히 하면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평화와 화해·협력 두 가지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든든한 안보태세 유지와 남북간의 화해협력 추진을 양대 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유화정책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북정책 3대 원칙 가운데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지원도 그 성격에 따라 완급과 규모를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간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하되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베이징 당국대표회담에서 북한에 비료 20만톤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이 최소한의 상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입장에서였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포용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하되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유화냐 강경이냐 하는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시각에 근거한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참여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느 한쪽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로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 스스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 북한에게만 맡겨 둘 경우 그들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변화와 개방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시켜 주고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급변사태 없이 북한을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참여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2. 햇볕정책은 왜 필요한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이자 민족 최대의 숙원이다.

그러나 통일에 앞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신과 반목,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평화적인 공존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선뜻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과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압박이나 봉쇄를 통한 강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더 이상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는 한편,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줌으로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거 남북관계에서 대북 압박정책이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남북관계를 긴장시켰을 뿐, 북한을 남북관계 개선쪽으로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데탕트 정책이 80년대 후반 냉전체제 붕괴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킴으로써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무대에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여전히 냉전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소모적인 경쟁을 지속하면서 민족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도 비록 정치·군사적으로는 갈등관계에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적으로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대립·대결·경쟁의 남북관계로부터 탈피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민족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햇볕정책은 소모적인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21세기를 앞두고 민족의 이익을 최대한 넓혀 나가려는 정책이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평화와 협력의 공존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압박과 봉쇄를 통한 대결정책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군비확장의 무한경쟁은 불가피하게 남과 북 모두에게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과중한 안보부담과 남북간의 긴장고조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은 해외자본 유치 등 IMF 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북한이 압박과 봉쇄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과 불안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전쟁도발로 대응해 나올 경우, 한반도는 다시 한번 동족상잔의 엄청난 불행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햇볕정책은 현 남북 관계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대안이다.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정책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오던 동서 양 진영의 대결구도는 이미 오래 전에 해체되었으며,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한이 상호협력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체제 위기가 고조되자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입과 확장정책을 통해 북한의 호전성을 순화시키고 연합국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상 우리의 대북정책을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대북한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3. 햇볕정책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착실히 이행·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한 남북 최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교환을 비롯하여 각종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간에 우선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협의·실행하고 점차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당국간 회담이나 합의 없이도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경협은 우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호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를 위해 이미 기업인의 방북 확대, 투자규모 제한 철폐, 경협 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었지만 1천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며, 영세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제3국 및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도 지원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부분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대북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농업개발 협력 및 경험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경수로 건설은 북한 핵동결의 대가로 지원하는 사업인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성실히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일간 재원분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남북 직접 대화와 병행하여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며, 4자회담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및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4.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계기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일(2.25)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대하여 국민의 93.8%가 지지를 표시하였다.

북한 잠수정 사건후 실시(6.28, 7.13)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집단 93.4%, 일반국민 62.4%가 햇볕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표시한 바가 있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처럼 소수 특정인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며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대북정책이 확고한 정책기조와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을 잃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오랜 고립과 폐쇄 속에 지탱해온 북한체제의 특성에 비추어 햇볕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햇볕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의 성공은 바로 우리의 힘과 의지와 인내력에 달려 있다.

햇볕정책은 강자(强者)만이 택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튼튼한 안보, 대북 자신감, 강력한 힘과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론은 과연 옳은가?

안보와 햇볕정책은 상충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우리의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병행접근 전략의 하나다.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는 햇볕정책을 쓸 수 없다.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와 한쪽을 이룰 때 효과가 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 3원칙의 첫 번째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류와 협력은 그 전제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이러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한쪽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또다른 한쪽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이룩한다면 한반도에 반세기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햇볕정책은 안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 잠수정 사건 등 대남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근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 대남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의 「무력도발 불용」 원칙에 입각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 군의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현정세의 이중성에 비추어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교류·협력추진이라는 병행전략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강력한 안보태세가 화해·협력을 가능케 하고,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안보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 강경세력의 저항 등을 감안할 경우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조급함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햇볕정책은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손길을 주어도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햇볕정책의 전제는 “북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언제까지나 폐쇄와 고립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며 그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처럼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북한은 이미 변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태도와는 다른 점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던 군정위가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의 형식으로 재개되어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인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였으며, 금년내에 금강산 관광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북한이 아직 미미하지만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통해 변화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시켜 나갈 경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북한의 변화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에게는 압박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거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고립·봉쇄정책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에 대응하여 과거처럼 압박과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 맞대응한다면 남북간 긴장과 대립은 지속될 것이며 북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공산권 외교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봉쇄정책' 보다는 화해정책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폐쇄사회를 개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냉전시대의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여 중심이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 강경세력의 입지는 약화되는 반면 온건세력의 입지가 커질 것이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의 햇볕정책은 대북정책 3대원칙에 나타나 있듯이 '당근'과 '채찍' 어느 한 쪽 면만 강조하거나 양자택일하는 입장의 산물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비추어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두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포괄적, 총체적 개념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가 갖는 유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 폐쇄체제의 외투를 벗기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평화공존 노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Tel:02-901-7161)

발행일/ 1995년 7월

표지디자인·편집/ 폴리디오(Tel:02-337-1078)

인쇄/ 정문사(Tel:02-323-3311~9)